



윤석열의
노동·연금 개악

2, 3, 4, 5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둘러싼 논쟁

8, 9, 10면

이란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보는 이란 반란

12, 13면

일본, 선제 공격 능력
확충하기로

16면



이태원 참사

6, 7면

윤석열의 노동개악 좌절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개악 중단하라

관련 기사 2, 3, 4, 5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강동훈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 대로 받기),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 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

12월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현행 9퍼센트에 15퍼센트로)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현행 62세에서 68세로) 등이 거론됐다. 그래야 2057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며 말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은 약 57만 원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은 20만~4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월세 내기에도 부족한 액수다. 게다가 노인 수백만 명은 이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한다.

한국 노인은 소득 중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25.9퍼센트에 불과(OECD 평균은 57.1퍼센트)하기 때문에, 은퇴도 하지 못하고 열악한 일자리를 두고 청년들과 경쟁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퍼센트로 OECD 평균(14.3퍼센트)의 2.8배나 된 까닭이다.

게다가 지금 서민 대다수는 불안정·저임금 노동으로 근근이 먹고살고 있고, 조기퇴직의 불안감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대상인 18~59세 3093만 명 중 37퍼센트인 1136만 명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0~70퍼센트 인상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힘든 현실을 더 팍팍하게 만들어



이미 평안한 노후 생활을 제대로 보장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을 더 개혁하면 서민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다

야 한다는 뜻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그리고 심각한 생계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정부의 연금 개혁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

기금 고갈?

정부는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톨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치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양 협박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고 도입한 것이지, 적금이나 사적 보험처럼 각자 국민연금에 투자해서 노후에 수익을 챙겨가라고 도입한 게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그 돈으로 연금 지급을 보조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애초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만 주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이는 국민연금이 태생부터 시장주의적 요소가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 기금이 쌓이게 돼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에 필요한 돈을 그해에 걷는 것으

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처럼 말이다.

문제는 이런 점을 뻔히 아는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과 정의당 같은 좌파 정당도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와 기업주들이 퍼뜨리는 ‘기금 고갈론’에 부화뇌동할수록 국민연금의 재원을 어느 계급으로부터 거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흐려지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돈을 거둬서 우리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을 보더라도, 2020년 한국의 공적 연금 총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7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국민연금 수지에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2040년에도 공적 연금 지출은 GDP의 7.8퍼센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OECD 평균(10.2퍼센트)보다도 낮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기초연금에 만족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연금 지급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필요한 돈은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보험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하게 만들고, 기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말끝마다 “미래 세대를 위해”라고 포장하고 있다. 이런 ‘세대 간 갈등’ 논리는 연금 개혁을 시도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현세대가 많은 연금을 받으면 연금 재정이 열악해져서 다음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적어질수록 그만큼 젊은 세대의 ‘사적 부양비’(부모님 용돈)가 늘어나야 한다. 건강보험이 취약해질수록 젊은 세대가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 부모 병원비 부담도 커진다. 공적 연금이 취약해질수록 자식들의 사적인 부양 책임은 커지는 것이다.

물론 ‘세대 간 갈등’ 논리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 받는 나이도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면,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처음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출수록 청년들은 더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부모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젊은이들이 희생할 것인지 또는 젊은이들을 위해 부모 세대가 더 고생할 것인지 하는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서민층 내에서만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공통 전가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은 젊은 시절 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들은 늙어서 평안한 삶을 보낼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은 이 사회의 부를 독차지해 온 부유층과 기업주들이 내야 한다.

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일 노동 개혁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 뒤에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연장, 쟁의권 축소 등을 담은 노동 개혁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은 노동·연금·교육 중에 노동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열의 선언은 사용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윤석열은 노동 조건 개혁을 역설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비난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계급 전쟁의 사령관이 되겠다고 선포하자 국민의힘은 노조 회계를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범정부적으로 땀공을 퍼부어 화물연대 파업을 꺾은 것에 친기업 언론들이 환호하고, 보수층의 지지 회복 조짐이 보이자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승리의 기세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의 연합체인 상공회의소를 찾아 노동 개혁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선언한 직후 노조를 겨냥한 ‘건설 현장 불법파괴의 200일 전쟁’을 선포했다. 벌써 수십 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국민의힘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형법이 아니라 채용절차법으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경찰뿐 아니라 노동부에게도 단속 권한을 주고, 엄격한 증거가 없어도 더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서 임금이 오른다며 말이다.

이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로, 반노동 공세의 본질이 기업 이윤 보호를 위한 임금억제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임금 억제의 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국적·인종별로 분열·경쟁시



윤석열의 공격 개시 명령 부패 원조인 현 여권이 노조를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모는 건 사용자들을 위한 절박한 공격 신호

켜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종차별도 강화할 것이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내국인 노동자들 수준으로 올리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 포기?

윤석열이 ‘법치’ 운운하며 부패한 개혁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노조에 덧씌우는 것은 보수 우파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단단히 부패 구조에 뿌리 박고 있는지 잘 아는 지각 있는 한국인이란 코웃음칠 일이다.

소수인 일부 노조에서 조합비 횡령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에 부패가 퍼져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윤석열이 노동조합 회계를 공격한 것은 그동안 노조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온 관행을 약점 삼은 것이다. 이는

특히 노동조합을 지도하는 관료층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술책이다.

이렇게 노동조합 관료층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을 보자면, 윤석열의 공격은 김대중 이래 역대 정부들이 ‘노사정 대타협’ 형식을 빌려 노동 개혁을 추진했던 것과 다른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타임오프제 도입 등 노조법 개혁 당시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사정 대타협 방식을 빌렸다.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 장석준은 이러한 배신의 대가로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윤석열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자를 임명했지만, 한국노총 지도부는 친민주당 노선을 취하고 있다. 대선에서도 이재명을 공개 지지했다. 한국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각자 정치 성향이 다르지만) 윤석열이 노사정 대화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사실 윤석열의 공격 개시 명령은 노동 개혁에 협조할 노조 관료층을 아직 포섭하지 못한 것과 관계 있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아스팔트 우파’와 연대해 온 김문수를 임명한 것도 이 점을 반영한다.

이는 윤석열이 거친 반노동 발언을 쏟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의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음을 뜻한다. 노동 개혁은 노동운동 측이 막아 낼 수 없는 공격이 아닌 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12월 21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이 연 비공개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재필은 노사정 대타협 방식을 취하지 않는 윤석열의 방식이 ‘성급하고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선불리 노동계 전체를 공격하는 오판을 하지 말라고 정부에 조언한 것이다.

윤석열이 필사적으로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해 나선 만큼 노동운동도 맞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막아 보려고 입법 문제에서 부득이하게 민주당의 손을 빌리더라도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 행동을 해야 한다. 화물연대 투쟁 배신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노동 개혁에서도 국민의힘과 타협할 공간이 꽤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법치”를 내세우며 공격한 과거 군사 독재 정권들에 대항해 당시 운동 측은 법을 과감히 무시하며 싸웠던 덕분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기억해 볼 만하다.



맞대응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대중 시위와 파업 등 독자적 행동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소수의 대기업, 금융, 공공부문 유노조 노동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또한 연공급 체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도 불공정하다고 한다.

최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노동 개혁의 첫발은 임금 체계 개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 해소, ‘공정과 상생’ 운운하며 직무성과급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직무급은 직무평가에 의해 상대적 가치를 정하고 직무 등급을 매겨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다. 정부는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 나이, 근속연수, 성별, 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직무급제가 연공급제(호봉제)보다 더 공정한 임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성과급을 반영한 직무성과급제가 “능력”과 “노력”을 공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 “평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정 임금” 옹호자들은 “지나친 평등을 강조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공정”은 사실상 임금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예컨대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은행과 마트 등 여러 기업들은 분리직군과 직무급을 이용해 노동자 중 일부를 저임금 직군에 묶어 둠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 최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한 ‘여의도 업무지구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여의도 업무지구뿐 아니라 청소직 종의 임금은 어디에서나 정확하게 최



직무성과급제는 ‘공정은커녕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길 뿐이다

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또한 “인적 속성이나 숙련, 역량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닌 오로지 비용 절감에만 목적을 둔 직무급 체계”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기업주들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만큼 올리기보다 별도의 직무를 만들 공산이 크고, 이를 통해 저임금을 고착화하려 한다.

저임금 고착화

사실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려면 그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용자들이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임금 억제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정년 연장마저 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직무 가치’나 성과에 연동되지 않은 임금 인상은 없애고 싶어 한다.

중장년 시기의 임금이 직무급제 등으로 억제·삭감되면 청년 노동자들의 생애 전체 임금도 삭감된다.

직무급제가 안착된 유럽의 사례를 보

면, 같은 직무에서 20~30년 일해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한국의 초임이 유럽보다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랫동안 낮은 수준으로 묶인다는 뜻이다.

한편, 직무 가치 평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도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간호나 보육 같은 돌봄 노동이나, 청소처럼 수익성이 낮은 노동은 직무가치가 낮게 정해지기 십상이고 그러면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실, 어지간한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한 까닭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무기계 약직, 자회사 등)도 직무급제에 반대하며 호봉제 도입, 근속 인정 등을 통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8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투쟁해 왔다.

게다가 성과급제는 임금 격차 완화를 커녕 노동자들 간 성과 경쟁으로 오히려 격차를 늘린다.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임금 인상 압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기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려 한다.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특히 개별 기업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맞서 싸우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로 몰릴 것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신정환

추천 소책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외 지음, 50쪽 2,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는 노동 개악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예고했다.(본지 445호 기사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참고하시오.)

이 밖에 추가 과제로 “파견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파견 제도 개정에 즉시 돌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파견”이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허용됐다.

파견 제도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직접 고용의 부담과 이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노동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 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필요도 없다.

즉, 파견법은 고용유연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다. 1998년 파견법 제정은 한국 고용유연화의 신호탄이 됐다.

불법파견

1998년 제정된 파견법에는 파견을 금지한 업종도 명시되기는 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가 대표적이다. 또, 파견이 허용된 업종도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기업주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파견이 금지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 기업주들은 도급으로 위장하는 꼼수를 부려 노동자를 사용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차별에 맞선 끈질긴 투쟁과 저항으로 2010년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냈다.

그리고 올해 불법파견과 관련해 대법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 온 노동자들 기업주들은 아예 파견 업종과 사용기간을 대폭 늘리고 싶어 한다

원의 중요한 세 가지 판결이 있었다. 사용자들의 불법파견 꼼수에 더한층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8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다. 이는 두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기존 자동차업종에서 제철업종으로 불법파견 판결이 확대된 것이다. 둘째, MES(제조실행시스템)와 같은 통합 전산관리시스템하에서 일한 하청노동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포스코는 기업주들에게 MES의 모범 사례로 추앙받았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관리시스템하에서 일하고 있으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승소한 상황이다.

●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

10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는데, 조립공정뿐 아니라 검수, 출고, 포장 등 이른바 “간접공정”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다.

● 불법파견 노동자의 노동조건

파견 허용 업무이지만 2년을 초과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쟁점이었는데, 기간제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악 시도

“권고문”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파견 제도를 고치겠다고 한다. 경영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한국의 파견 허용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고, 사용기간이 짧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늘리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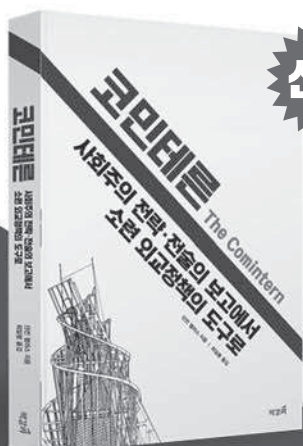
파견 노동자들의 격차 해소를 위해 파견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행 파견법에도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법 규정이 공문구라는 것이다.

또, 개악안은 “파견과 도급 구별”을 강조한다. 대기업 제조공장의 기업주들이 파견법상 금지 조항을 회피하는 핵심 꼼수가 도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는 도급의 기준을 기업주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려 할 것이다.

기업주의 인적자원관리론을 보면 노동유연화란 세 측면,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직무성과급제, 파견 확대를 통해 그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김광일



코민테른

사회주의 전략·전술의 보고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도구로

던컨 핼러스 지음 | 최일봉 옮김 | 296쪽 | 15,000원

오늘날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국제 노동계급 운동의 절정기!
코민테른은 어떤 변화를 겪으며 왜 결국 변질했는가?

세계적 경제·정치·기후·팬데믹 위기, 핵전쟁의 위험 등 다중 위기의 시대다. 근본적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국적·성별·인종 등을 뛰어넘어 함께 연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100여 년 전,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며 코민테른에 모인 혁명가들에게서 배울 점은 없을까? 이 책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혁명적 경험뿐 아니라 스탈린의 반혁명, 파시즘의 부상, 민중전선이 낳은 재앙 등에서도 비판적 교훈을 이끌어 낸다.

〈노동자 연대〉에 실린 서평, ‘혁명의 학교’를 읽어 보세요.



책갈피

(02) 2265-6354 | <https://chaekgalpi.com>
facebook.com/chaekgalpi | instagram.com/chaekgalpi_books

거듭되는 참사, 국가, 자본주의

김승주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저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면, 참사 희생자들이 우연히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 살아 있는 나머지가 우연히 참사를 피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워싱턴포스트〉 11월 2일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 상인을 인터뷰했다. 그 상인은 자신의 딸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때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다리를 건너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8개월 전인 2013년 7월, 태안 청소년 해병대 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다섯 명이 무리한 군대 식 극기 훈련을 받다가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제세호 학생의 아버지 제삼열 씨는 아들과 같이 텔레비전으로 이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 사고가 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제세호 학생이 그곳으로 간부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월호 희생자 고(故) 임세희 학생의 아버지 임종호 씨는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 유가족 진압 임무를 명령받은 의경이었다. 임종호 씨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권력자들은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그 책임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려 하지만, 거듭되는 참사 속에 국가 책임론이 공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왜 존재하나' 하는 절규가 나온다

명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정기 여론 조사에서 재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 1위, 내년 정부 예산에서 가장 많이 증액돼야 할 분야 1위로 꼽혔다.

그러나 대중의 바람과 달리, 재난 안전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뒤로 밀리거나 예산이 깎이는 분야이다.

정부는 1년에 하루 발생하는 참사에 대비하기 위해 나머지 364일 내내 안전 대응 투자를 하는 것이 비효율이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기 2년 전인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해상 구조·구난의 많은 부분을 민영화했다. 당시 해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댔다. "해양 사고는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당시 2000억 원대에 불과했던 해경의 재난 안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액수가 똑같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은 군사비에 30~50조 원 이상을 쏟아부으면서도 이를 전혀 낭비라 여기지 않았다.

국가의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 문제가 이태원 참사와 다른 모든 사회적 참사들을 공통으로 관통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다.(이태원 참사의 배경에 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본지 440호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참사 — 체제의 불박이장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둘 다 우파 정부하에서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참사가 우파 정부하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만료 직전인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발생해 192명이 사망했다. 정부와 대구지하철공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유독 가스를 많이 내뿜는 내장재를 사용했다. 인건비 절약을 이유로 1인 승무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안전 점검 인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처벌은 방화범과 기관사에게 집중됐다. 기소된 나머지 9명도 지하철 하급 직원들이었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시설부장은 기소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 무죄를 선

고받았다.

사망자만 무려 1만 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안방의 세월호' 가슴기 살균제가 정부 허가를 받고 출시된 시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가슴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긴 제품은 중소기업이 만든 '세퓨' 제품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제품을 허가했고, 심지어 이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유해하지 않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인재형 참사가 '후진국형 참사'라는 얘기를 곧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에서도 참사는 대형 화재, 열차 탈선 또는 충돌, 선박 침몰 등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벌어져 왔다.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

을 은폐하는 데 골몰하는 국가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진국'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압사 참사도 물론 있었다. 1989년 4월 영국에서 벌어진 힐즈버러 참사로 축구 경기장에서 96명이 압사당했다.

총기 난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96명이나 사망한 것은 순전히 경찰이 관중을 한 곳으로 무리하게 입장시켰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압사 공포를 느낀 관중들이 철망을 오르거나 다른 구역으로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도로아수라장으로 밀어넣었다.

이 참사 이후 경찰은 술 취한 홀리건 탓으로 책임 돌리기에만 급급했다. 경기장 주변 쓰레기통을 뒤져 술병을 찾아내고 증언을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

1989년 공개 조사 보고서가 경찰의 군중 관리 부재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는데도 기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자들은 무죄를 받았다.

보수당 정부는 물론,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했던 노동당 정부 기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토니 블레어 정부가 새로운 공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개 조사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고 그 결론은 '공개 조사 필요 없음'이었다.

2000년에 경찰 책임자들이 무죄 또는 평결 미완 상태로 재판이 끝났다. 줄기찬 투쟁 끝에 2016년이 돼서야 영국 법원은 힐즈버러 참사의 원인이 술 취한 관중이 아니라 당일 현장을 지휘한 경찰에 있다고 판결했다.

자본주의 국가

국가는 왜 매번 참사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를 억누르는 편에 서는 걸까?

국가에 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아마도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설일 것이다. 홉스는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벌인다고 봤다. 그가 보기에, 이런 파괴적 상태를 끝내기 위해 등장한 선악의 판단자, 질서의 기준이 바로 국가다.

마르크스는 홉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마르크스는 국가가 없을 때 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인간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들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강제력으로 유지하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계급 간 적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국 자본이 착취와 축적에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에 필요한 수입을 얻을 수 없다. 세 수입의 원천이나 차입 등을 통해 자원



12월 16일 윤석열에게 요구 서한을 전달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가로막은 경찰

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모두 기업주(자본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언제나 기업주들의 이해관계에 빠르고 우호적으로 반응한다.

요컨대 자본주의 국가는 근본에서 기업주들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개별 자본가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외교와 군사력을 통해 자국 자본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국내에

서 자본 보호를 위한 대중을 통제하기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그렇다면 자본가들이 맹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쥐어짤 때는 단결하면서도, 시장에서 누가 더 많은 이윤 몫을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는 피 튀기게 경쟁하는 “서로 싸우는 형제들”(마르크스가 한 말)이다. 이 경쟁은 끝도 없고, 질서도 없다.

한 순간이라도 경쟁을 소홀히 하면 뒤처지다가 결국 파산해 중간계급이나 노동계급의 일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한 “축적을 위한 축적, 경쟁을 위한 경쟁”이 자본가들의 최대 과제가 된다. 자본가 계급은 이 축적의 압력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

그런 이윤 경쟁 속에서 평범한 다수의 안전과 생명은 너무도 쉽게 내팽개쳐지는 것이다.

노동계급 투쟁

진보적 또는 좌파적인 정치 세력이 대통령·의회 선거에서 이기면 자본주의 국가를 통제할 수 있을까? 서구 역사를 보면 선거에서 좌파(대체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이겨서 집권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무한 이윤 경쟁이라는 동학은 고스란히 지속됐고,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 성격도 근본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좌파 정부는 아예 배신을 저지르거나 실패했다.

좌파 정당이라 할지라도 기성 정치 틀 안에서 살아남아 자리를 잡으려면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의 상당 부분이 자본가 계급과 여러 연줄로 연결된 비선 출신 관료들로 이뤄져 있다. 법을 해석하거나 이용하고 억압적 강제력을 직접 행사하는 이 관료들은 국회의원보다 국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좌파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부에 입각하더라도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좌파 장관들은 이들과

위 관료에 거듭 타협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우선순위를 대변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본주의 국가의 우선순위에 맞선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이윤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자본가 계급과 국가를 진정으로 위협할 수 있는 노동계급이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따라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물론 체제의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당면한 투쟁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들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과정 속에서만 비로소 대중의 의식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문제를 윤석열 퇴진 요구와 연결시키는 운동을 확대·강화하는 것, 노동자들의 생계비 저항에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퇴진 요구를 연결하는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재반론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깎아내리기

이현주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아래 사진)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깎아내리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김 대표는 12월 17일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이 “게으른 방식의 운동”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발표가 정의당과 자신에 대한 <노동자 연대> 신문의 비판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도 스스로 밝혔다.

이 발표에서 김 대표가 제기한 핵심 논점은 이렇다: 현재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운동은 2019년 서초동 조국 수호 촛불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민주당 지지 세력의 이재명 방탄용 집회일 뿐이다. 따라서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는 체제 전환은 물론이고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김 대표는 본지가 제기한 주요한 문제들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이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회?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은 현재 윤석열 정부 자체를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다.

집권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정권 퇴진 요구가 대중 운동으로 성장한 것은 윤석열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물가 폭등으로 생계비 위기가 커지는데도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노동계급 등 서민 대중에게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고통을 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단속하려고 권위주의를 강화했다. 이재명 수사, MBC, 교통방송, YTN 등 비판 언론 억압도 그 일환이다.



사진 출처: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한 번이라도 집회에 참가해 본 사람이라면, 이 집회에 윤석열에 대한 다양한 반감이 모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수사 중단은 종종 핵심 구호이지만, 노동자 투쟁 탄압과 노동개악 반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반대, 언론 탄압 반대 등도 중요한 요구들이다. 이런 다양한 불만들 때문에 많을 때는 수만 명이 모이는 운동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끔찍함을 비극적으로 드러낸 일이고, 윤석열의 정책 노선이 참사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퇴진 운동이 이태원 참사에 강력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평범한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정부의 책임 회피에 분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비극이 닥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추모가 정치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항의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정한 눈으로 보면, 지난 8월 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기던 상황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은 가장 앞서서 대중의 반감을 대변했고, 11월부터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더 커진 분노를 모아내는 구심점 구실을 했다.

이런 점들에서 김 대표가 이 운동을 2019년 서초동 조국 수호 촛불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 당시와 지금의 운동 지도부의 인적 구성이 비슷하더라도 각각의 운동이 벌어지는 맥락과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2019년 서초동 촛불은 정권 핵심부를 방어하는데 기여하는 운동이었다면, 2022년 촛불 운동은 정권 핵심부를 공격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 게다가 조국은 위선과 가치관이 문제였지만, 윤석열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이 운동의 성격이 민주당 지지 세력의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곳곳이 강변한다. 진작에 윤석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 운동에서 분열해 나가 지금은 서초동에서 이재명 수사 반대를 내걸고 집회를 여는



김민오 기자

정의당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이 민주당에 더 비판적이다

촉의 웹자보(“내가 이재명이다”)를 퇴진 집회의 공식 구호인 양 부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설사 퇴진 촛불 참가자 다수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면 또 어떤가? 이 운동이 하는 객관적 효과가 민주당에 대한 수동적 지지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데 말이다. 김 대표 식의 논리라면, 박정희 유신 정권의 숨통을 조였던 부마 항쟁도 김영삼 방탄용이고, 광주 항쟁도 김대중 방탄용이라고 할 것인가? 가령 부마 항쟁은 첫 시위부터 “김영삼 총재 제명 철회”를 외쳤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김대중 석방하라”를 외쳤다.

그런 식으로 대중 운동의 의미를 재단하고 축소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에 대한 수사 압박은 반대하는 것이 옳다. 정부·여당이 확증도 제시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실상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공격하는 진의는 정권에 대한 광범한 반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12월 6일자 촛불행동 논평이 지적하듯이,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눈을 돌려 윤석열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잠재우고 윤석열을 위협하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정의당의 실천

사실 정의당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이 민주당에 더 비판적이다. 촛불 집회에서는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비판하는 연단 발언이 크게 호응을 얻었다.

민주당의 배신이 영향을 미쳐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일도 크게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

김 대표는 퇴진 운동을 민주당 2중대로 보고 깔보지만, 정작 민주당과 실질적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는 비판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 문제 모두에서 민주당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도 말이다.

김 대표는 2019년 가을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확연히 차별화되도록 “왼쪽으로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 패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

퇴진 운동이 “체제 전환”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일견 급진적으로 보이는 그의 언사가 진지한 말로 들리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저 퇴진 운동과의 거리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밖에 안 들리는 것이다.

▶ 9면으로 이어짐



▶ 8면에서 이어짐

개혁을 이루려면 대중 행동이 관건이다

이런 종합적 맥락에서 노동자연대는 10월 22일 이후 윤석열 퇴진 집회를 지지해 왔고, 특히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는 적극 동참해 왔다.

운동이 전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운동이 좀 더 확장되기 위해 ‘김건희 특검’ 같은 부차적 요구보다는 서민층을 위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더 부각시키자고 말이다. 그리고 화물연대 투쟁 지지 홍보전을 집회장에서 벌이고, 노동자 투쟁과 퇴진 운동이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퇴진 주축측도 이런 방향으로 집회를 이끌어 왔다. 촛불행동은 공식적·공개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12월 3일 집회 홍보는 특별히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강조했고, 화물연대 측에 두 번이나 본집회 연단을 제공했다. 최근엔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단식 농성장 지지 방문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화물연대 지지 호소에 적극 호응했다. 이런 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줬다. 앞으로 조직 노동자들이 퇴진 집회에 많이 참가하면 더 좋을 것이다.

김 대표는 이런 점들을 없는 일처럼 취급한다. 회피를 정당화하려고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 운동이 보여 준 실제 모습은 이 운동을 앞뒤 막힌 민주당 추종자들의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얼마나 편견 가득한 견해인지를 보여 준다.

실제로는, 퇴진 운동 내부는 단일하지 않고 운동의 향방을 두고 참가자들의 고심도 있다. 대안 부재감도 있다.

**투쟁 속에서
투쟁의 근력과 대중의 의식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히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하다.**

정의당 등 진보계 지도부들이 퇴진 운동 참가자들과 공감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러한 대안 부재감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엘리트주의

현실의 대중 운동에 참여해 이를 더 심화·발전시키려 하는 대신에 김 대표가 추구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김 대표가 퇴진 행동에 참여하게 반대하는 것은 정의당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도 대중 투쟁보다 선거와 의회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김 대표는 정의당에 입당할 당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바꿀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집단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를 근간으로 한 정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다. ... 적어도 이 룰(rule)에 맞춰서 경기에 뛰어든 용기가 있다면, 정당을 통해 제도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 사회운동은 제도 정치와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김창인, ‘우리는 지금, 왜, 굳이 정의당에 가려고 하는가?’, 2019년 9월 25일)

그러나 현실에서 개혁을 쟁취하는 힘은 의회가 아니라 대중 운동에 있다. 진정한 권력은 선출된 의원들이 아니라 대기업 이사회와 국가 관료들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와 의회 활동은 대중 운동의 보조물이 돼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과 국가 관료 기구의 권력을 상당히 침해하는 개혁은 만만찮은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에서 반값 등록금 같은 부분적 개혁조차 2011년 한대련 대학생들의 대규모 투쟁으로 가능했었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기업주들과 국가 관료들이 이윤과 권력 보존에 필사적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선거와 의회도 이런 운동의 성장과 대중의 자신감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기다리는 태도로는 그런 발전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혁 쟁취도 불가능하다. 선거 논리는 선거 참여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배적 편견에 부합되게 처신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한다. 그걸 극복하려면 엄청난 규모로, 급진성으로 대중 운동이 전개돼야 하고 선거 참여자들도 거기에 종속되는 규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내에서 선거와 의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전략은 거듭 실패해 왔다. 이런 개혁주의 전략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개혁가들을 시스템과 기존 질서의 포로로 바꿔 놓기 일쑤였다.

반면, 대중 행동은 대중이 경험 속에서 의식 발전과 자기 역량 강화를 이를 기회를 제공한다. 투쟁 속에서 투쟁의 근력과 의식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히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도 민주당만 좋은 일을 시켰다고 볼 일은 전혀 아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기성 정치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어되도록 철도 파업을 끝내도록 종용하고,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맞서 싸우지 않은 정의당 지도부의 실천을 오히려 성찰해야 한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의 심화 때문에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공격하려 더한층 쌍심지를 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잖게 시스템이 정한 굴레 안에서 활로를 찾으려다가는 우리 삶을 결코 지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진심으로 “체제 전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급진적인 대중 운동에 거리를 뒤흔는 안 된다. 윤석열 퇴진 운동이 향후 훨씬 더 큰 투쟁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애써야 한다.

김창인 대표가 코웃음 칠 (그러나 그가 배워야 할) 사례 하나

김 대표는 편견 가득한 눈으로 이 운동을 보며, 이런 운동으로 “체제 전환”은커녕 참사의 반복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마치 노동자연대가 이 운동으로 “체제 전환”을 이루자고 한 양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지금은 윤석열 퇴진 촛불은 물론이고, 그보다 수십 배 컸고 승리한 박근혜 퇴진 촛불도 “혁명”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 기존 국가 구조가 고스란히 온존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쟁점은 현실에서 펼쳐지는 대중 운동에 대한 태도 문제다. 현실의 대중은 온갖 모순된 관념들을 간직한 채로 운동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는 운동 참여를 통해 경험이 발전하며 의식도 발전한다.

1905년 1월 러시아에서 가폰 신부가 황제(차르)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수십만 명의 운동을 이끌었을 때, 심지어 그가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음에도 레닌은 그가 이끄는 운동을 지지했다. (실제로 나중에 가폰은 경찰 첩자였던 것이 드러났다.) 가폰은 대중의 불만이 차르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려고 ‘자비로운 작은 성부에 대한 청원 행진’으로 운동을 이끌었지만, 차르가 평화 행진에 총격 진압을 지시한 ‘피의 일요일’ 사건 이후 대중의 급진화, 러일전쟁 패배, 일련의 경제 파업들의 효과 등이 결합되면서 그해 가을에는 저항이 혁명으로 발전했다.

운동의 특정 지도자나 지도적 이데올로기가 선험적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살아 움직이는 대중 운동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종파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문제를 윤석열 퇴진 요구로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김인식

12월 7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했다. 참여연대 등 엔지오들과 전국민중행동 등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유가족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 … 대책회의는 유가족들이 내세우는 것을 그대로 받아안는다.”(12월 17일 민교협2.0 등이 주최한 토론회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한국 정치’에서 한 말.)

유가족들이 체념하지 않고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다.

지금 유가족들은 정부의 뻔뻔한 책임 회피와 우파 정치인들의 막발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대통령 윤석열을 참사의 정치적 책임자로 지목해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이태원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는 논증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본지 440호,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유가족들이 정치적으로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유가족들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일부 유가족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은 윤석열 퇴진 촛불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연대〉는 11월 16일에 이렇게 썼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집단으로든 개별로든) 윤석열 반대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소중한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운동이 꼭 유가족을 중심에 놓고 — 즉, 그들이 이끌어 — 건설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윤석열에 확고하게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441호,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 막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을 중심에 놓으면서 스스로 윤석열에 대한 정면 공격을 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민대책회의의 “5가지 활동 기조”에도 윤석열 책임 부분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유가족들이 제시한 6대 요구 사항과 대동소이하다.



12월 7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식

“겹쳐지지 않도록” 애쓰기

박석운 대표는 시민대책회의가 윤석열 퇴진 운동과 “겹쳐지는 부담감”을 피하려고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2월 7일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하기 훨씬 전인 11월 내내 윤석열 퇴진 운동은 “퇴진이 추모”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대규모 항의를 하고 있었다.

물론 윤석열 퇴진 운동은 이태원 참사 항의에 국한된 부분적 운동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 반대를 표방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운동이 주목할 만한 탄력을 받게 된 계기는 두 가지였다. 그것은 화물연대 파업과 이태원 참사였다. 그런 만큼 이태원 참사 항의는 윤석열 퇴진 운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후 퇴진 운동은 매주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만약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협의회와 독립적으로 조직해 서로 연대하며 활동하기로 한다면 굳이 윤석열 퇴진 운동과 스스로를 예리하게 분리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11월 12일에도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은 윤석열 퇴진 집회와 같은 시각에 경쟁적으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 시민 추모 촛불을 개최해, 조합원들의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를 차단한 적이 있다.

대중 운동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기

이런 사례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윤석열 퇴진 요구를 억누르려 애쓴다는 점을 보여 준다. 개혁주의자들은 선거와 의회 등 헌정 질서 내에서 질서 정연한 변화를 추구한다.

러시아의 혁명이 트로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개혁주의자들은 대중 운동의 혁명적 잠재력을 두려워한다. 개혁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무대는 의회 연단, 노조 사무실, 중재 기구, 장관 면담실이다.”

현재 한국이 혁명적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유기적 일부로서) 한국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 — 경제 · 지정학적 위기와 그로 인한 정치 위기 — 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혁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규모 투쟁이 벌어질까 봐 전전긍긍한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가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을 “애로 사항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퇴진 운동을 “배제”하지 말고 “소통” ·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퇴진 운동이 통제에서 벗어날까 봐 우려해서일 것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개혁주의자들이 운동을 일정 수위 이하로 억제해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려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대중 투쟁보다 선거를 활동의 중심에 두는 한국의 많은 좌파들이 주목하는 칠레의 경험도 그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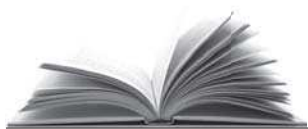
2019년 10월 칠레 대중은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신자유주의 전반에 도전하는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운동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11월에 정부가 기만적인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핵심 내용은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되 시위대 탄압을 주도했던 당시 대통령과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개혁주의자 가브리엘 보리치는 정부 안을 수용했다. 대중 투쟁의 절정 속에서 칠레 좌파의 압도적 관심은 무려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빠르게 이동했다.

2021년 12월 보리치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보리치는 개혁 약속을 배신해 대중의 환멸을 샀고, 결국 지난 9월 개헌 국민투표에서 우파에 패배했다.

선거 중심 한국 좌파들은 보리치가 “평화협정”에 타협함으로써 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즉, 운동이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일정 수위 이하로 억제하고 사회 평화와 체제 안정 속에서 점진적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평 |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진영 논리로 제국주의에 맞서기를 주장하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최근 번역·출간된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좌파적 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 위기가 푸틴의 야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지배자들의 공포에서 오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미국이야말로 패권을 지키려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벌여 온 가장 위험한 제국이며, 그런 모험과 나토 확장을 빼놓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옳게 지적한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떻게 동맹국들을 결집시키고 중국과의 더 큰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책의 마지막에 실린 《먼슬리 리뷰》 편집자 벨라미 포스터의 글은 핵 재앙까지 기꺼이 감수하려 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전략을 파헤친다.

한국을 포함한 친서방 나라의 좌파들에게 서방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은 철저하게 진영논리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저자들은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의 동맹,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에 기대를 건다.

저자의 한 명인 존 로스는 “모든 부문에서 중국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미국에 맞서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저자들도 대체로 이런 견해를 공유한다.

로스는 중국의 핵무기를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이며 “방어적” 목적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한다.(같은 책에서 벨라미 포스터가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 E. P. 톰슨이 ‘방어적 핵’은 없다며 모든 핵무기의 일방적 폐기를 강조했다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저자들의 이런 진영 논리에는 우선 분석상의 문제가 있다. 바로 제국주의를 미국의 지배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레닌과 부하린은 제국주의가 여러 강대국의 경쟁 체제임을 강조했다.

레닌과 부하린에게 제국주의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로, 규모가 커지고 국제적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국가와



제국주의를 국가 간 관계로만 환원해 계급 투쟁과 반전 운동의 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융합하면서 벌어지는 국가 간 경쟁이었다. 레닌 이후 제국주의의 구체적 양상은 변화했지만 이러한 핵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자들은 오늘날 미국이 과거만 못한 경제적 우위를 군사력으로 만회하려 해 왔다고 옳게 지적한다. 이는 오늘날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되는 주된 양상의 하나다.

그런데 저자들은 마치 두 경쟁을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그런 가정은 군사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을, (미국이 추구하는) 호전적 경쟁과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평화적 경쟁으로 종종 대비시키는 데서 드러난다. 제국주의는 마치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교역 확대에 따른 평화적인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미국 지배자들의 호전적인 정책처럼 묘사된다.

이런 분석은 자본주의의 경쟁적 축적 동학과 전쟁을 분리시키려 한다는 면에서는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과도 통한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정확히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미·중 갈등은 중국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군사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갖추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지배자들 또한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경쟁의 플레이어인 것이다. 그들은 이 경쟁적 축적 체제 자체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중국이 미국과는 뭔가 다른 진보적 질서를 대표한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자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서방 다국적기업들과도 손잡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독재 정권도 얼마든지 용인하고 지원했던 것처럼, 중국도 자신이 진출한 지역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 지역의 독재자와 얼마든지 협력했다. 중국 광산 회사인 안진과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권의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중국은 사우디 독재자 빈 살만과도 손잡았고, 심지어 무기 제조기술도 사우디에 제공했다.

반전 운동

저자들은 미국의 반전운동이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막강한 외부의 제약”(중국)만이 미국의 전횡을 저지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펴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혼란 때문에 현재 각국의 반제국주의적 반전 운동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반전 운동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그 투쟁을 전진시킬 정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막강한 외부의 제약”에 의지하는 것으로는 그런 정치를 제시할 수 없다.

제1차세계대전은 러시아 병사와 노동자들이 전쟁의 부담을 짊어지기를 거부하고(1917년 러시아 혁명) 독일 병사와 노동자들이 그 뒤를 따름으로써(1918년 독일 혁명) 막을 내렸다. 당시에 그토록 되기까지 반전 운동은 한동안 고립되고 주변화돼 있었고 사태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데бора 베네치알레, 존 로스, 존 벨라미 포스터 지음, 비자이 프라사드 엮음
두번페테제, 148쪽, 13,000원

반전 운동이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반대 정서와 물질적 조건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나면서부터였다. 이 만남은 자동적이지 않았고,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동시에 노동계급에 뿌리를 내리고 둘을 연결 짓기 위해 분투한 혁명적 좌파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과 계급투쟁을 연결하고 노동계급이 자신의 경제적 힘을 제국주의에 맞서는 데에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과 함께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연결을 수행하지 못하면 기회만 놓치고 마는 게 아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이 첨예한 독일 등지에서는 좌파가 그런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극우가 반전 세력을 자처하며 득을 보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위기에 빠진 현재, 자본주의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은 소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도 그런 사례의 하나다.

이 책의 저자들처럼 제국주의를 오로지 국가 간 관계로 환원해 이해한다면, 이른바 ‘반미’ 세력에 속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노동계급 투쟁을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양 세력 모두에서 노동계급 투쟁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제국주의에 진정으로 맞설 잠재력을 키울 수도 없을 것이다.

이원웅

이란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말하는 이란 항쟁

페이먼 자파리 이란인 역사학자

다음은 이란 출신의 이란 노동운동사 연구자 **페이먼 자파리**가 12월 7일 중동 전문 잡지 《미들리스트 솔리대리티》 등이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한 발제를 옮긴 것이다. 《미들리스트 솔리대리티》 편집자 앤 알렉산더가 녹취록을 읽기 좋게 편집했다.

오늘(12월 7일)은 이란에서 선포된 3일간의 집중 시위와 파업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집중 행동 마지막 날인 것은 우연이 아닌데, 오늘은 이란의 “학생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 날은 1953년 테헤란대학교 학생들이 당시 미국 부통령 닉슨의 이란 방문과 영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항의한 사건을 기리는 날이다. 그로부터 4개월 전인 1953년 8월 미국과 영국은 이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 한 총리 모사데크에 맞선 쿠데타를 조직했었다.

그해 이래로 12월 7일은 학생의 날로 정해져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재와 외세의 지배에 항의하는 날이 됐다. 오늘 행동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지난 두 달 반 동안 이어진 시위가 이란인들이 자유를 쟁취하고자 벌여 온 집단적 투쟁의 오랜 전통을 잇는다는 것이다. 역사가로서 나는 항상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역사를 더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역사가 실로 20세기 내내 이어져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1906년에 이란에서는 이란 최초이자 중동 최초의 혁명인 ‘헌법 혁명’이 벌어졌는데, 이 역시 이란 정부의 억압과 외세의 지배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란 시위대는 정치 체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혁명적 전망이 있는 항쟁

두 달 반 동안 이어지고 세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번 시위에 관해 내가 주목하는 점은, 이 시위가 수많은 이란인의 의식을 바꾸고 이란이슬람공화국 역사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전에 시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2009년에도 이란에서 대중 시위가 벌어져, 300만 명이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로 나왔다. 이 시위는 주로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다. 핵심 구호는 “내 표는 어디 갔나”였는데, 이는 당시의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위를 통해 아래로부터 압력을 가하면 체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느 사회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시위에도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불문한 온갖 계층의 사람이 참가했다. 그러나

주된 구성원은 중간계급이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심각해지는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분출했다. 2019년 11월에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당시 정부의 연료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이 시위는 전국적이었고 실직자와 불안정 노동자들이 주로 참가했다. 이 시위의 요구는 주로 사회·경제적인 것이었다. 정치적 요구도 당연히 일부 있었지만 말이다.

현재 벌어지는 시위에서 중요한 점은 정치적 자유, 사회 정의, 문화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융합이 균등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하지만 지금 이란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중간계급 청년과 노동계급

사람들 사이에 느슨한 연합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힘을 합쳐 정치 체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운동을 혁명적 전망이 있는 항쟁으로 규정한다.

시위의 성격 규정하기

이 시위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 시위가 혁명이 아니기를 바라는가 아니다. 오히려 정말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나는 이 항쟁이 혁명의 동역학을 떠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본격적인 혁명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그러려면 이란 거리 시위가 훨씬 커져야 한다. 현재 시위는 수만 명 규모다. 혁명이 벌어지면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참가하고, 이란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통해 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 혁명

이 벌어지려면 정권 최상층부에서 균열이 커져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무너지고 혁명적 운동을 위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 모든 동역학은 분명 작동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사태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사회와 정권 사이의 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패였다는 점이다. 이란 사회가 시위 시작 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두려움이라는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규모 탄압 속에서도 거리를 지키고 있다. 이미 1만 8000명 이상이 체포·투옥됐다. 470명 이상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9명, 어쩌면 11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들었다.

시위를 지속시키는 두 요소: 대학과 쿠르드족

정권은 사람들을 겁주려 하지만 소득은 별로 없다. 향후 몇 달 동안 정권은 탄압을 하면서도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어느 정도 양보도 하는 이중 전략으로 방향을 바꿀 듯하다.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권은 거리 시위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이미 몇몇 승리를 거뒀다. 예전대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여성들은 이번 시위의 최전선에 있으며, 여성의 권리는 시위의 요구 중 가장 전면에 있다. 시위 속 여성들은 그저 이 체제의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항의 최전선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래서 시위가 계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위가 발전해 온 궤적도 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 시위가 성공하려면 더 많은 대중이 참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상당히 불균등하기 때문이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시위의 규모에 기복이 있었지만, 두 가지 요 때문에 지금까지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요소는 오늘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란의 대학들이다. 오늘 알라메 타바타바이 대학교 학생들은 “우리는 노동자의 자식, 우리는 노동자 곁에 선다”, “학생-노동자 단결, 단결”이라는 구호를 걸고 행진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학은 중요한 조직 거점인데,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모여서 운동을 지속시키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둘째 요소는 쿠르드족 지역이다. 시위의 기복에도 쿠르드족 지역에서는 시위가 꾸준했는데, 탄압이 가장 심한 곳인데도 그랬다.

이는 쿠르드족 지역에 정치 조직과 노동조합 조직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업이 더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이 두 요소가 현재 시위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파업에 나선 계약직 석유 노동자들 혁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대중 파업이 필요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노동자 투쟁의 양상

그러나 과제는 대중 파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매우 긍정적인 징후가 분명 있었다. 예전대 전국 40개 도시에서 상점 주인들이 철시를 했다. 물론, 그 곳의 모든 상점이 철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부가 철시에 참가했다. 이란에는 인구가 2만 명이 넘는 도시가 340개 있다. 이중 거의 10퍼센트에서 철시가 있었던 것이다.

시위 초기에 산업 부문에서 몇몇 파업이 있었는데, 대개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석유 노동자들이 벌인 것이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중요한 전환일 것이다. 이스파한 제철 노동자들과 몇몇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도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아직 산업 부문에서 대중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교사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이란 여성 노동자의 다수가 서비스 부문에 고용돼 보건·교육 부문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

요하다. 이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8퍼센트에 불과해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여성의 복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바람뿐 아니라 여성이 공적인 공간과 작업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없애려는 열망도 시위의 동기가 되고 있다. 이란 대학생의 약 60퍼센트가 여성이지만,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온갖 차별적 법률과 작업장 성차별에 시달린다. 시위 참가자들은 여기에도 맞서고 있는 것이다.

대중 파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마지막으로 이 파업들이 총파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 조직의 출현을 막으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이미 교사, 석유 등 여러 부문에 비공식적인 노동자 네트워크가 있다.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이 네트워크가 파업을 조율하고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이란의 경제 상황이 실로 끔찍하다는 것이다. 나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여러 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들 모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은 파업 기금이 없어서 실제로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빈곤 때문에 파업에 필요한 예비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빈곤은 국가의 관리 실패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란에 부과된 경제 제재 때문에 더 심각

해졌다. 이런 식으로 제재는 사회를 멈출 잠재력이 있는 노동자들의 힘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제재가 없었다면 대중 파업을 실제로 조직할 자신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셋째, 현재 이 운동에는 사회 정의 요구가 부족하다. 많은 구호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문화적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도 그 결과는 이슬람주의 엘리트들 세속 엘리트로 교체하는 데 그쳐서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중동과 이집트 등지에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노동자들 사이에서 견어내고 확신을 심어 주려면 사회 정의 요구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미 기층과 지역 수준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 정의에 관한 요구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생·노동자 단결’ 구호가 중요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란 밖에서 서방 정치지도자들은 다른 담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방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운동 대표자들을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사회 정의에 관한 구호를 내세우고 탄압받는 이란 반정부 세력 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레일라 호세인자데를 기리며 발제를 마치고 싶다. 호세인자데는 좌파 활동가, 학생 운동가, 학생회 회원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구축하는 조직자다. 현재 호세인자데는 건강 상태가 심각하며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체와 공론장에서 그녀의 소식을 널리 알려달라고 모두에게 호소한다. 그로써 현재 이란의 수감자들이 충분히 조명받기를 바란다.

출처 '메나(MENA) 솔리더리티 네트워크'
번역 박이랑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10분 정리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투쟁 취재 영상
- 맑시즘 강연 음원

총 470여 개 콘텐츠



채널 바로가기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인쇄소 등록번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5 2



사진 출처: MBC 뉴스데스크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석 달째 억류된 사람도 있다. 이를 MBC가 12월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러시아에 있는 것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구 송환대기실)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출국대기실은 조건이 너무 열악해 난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바깥 공기가 통하는 창문이 없고 형광등이 24시간 켜져 있다. 개인 공간이 없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끼니는 매우 부실하다.

러시아인 난민들은 하루 세 끼 지급되는 머핀과 과당주스로 버텨 왔다. 가져온 돈이 떨어져 외부 음식은 사먹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위장병과 충치까지 생겼다.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2주 전부터야 하루 한 끼 닭고기와 밥이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연대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에도 요트를 타고 온 러시아인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한 바 있다. 윤석열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 연대로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연설한지 한 달 만이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인 난민을 “불법 이민자” 취급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푸틴의 공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작 푸틴의 억압을 피해 온 이들은 잔인하게 내친 것이다.

이런 문전박대는 불의한 전쟁에서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는 러시아 청년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냉혹한 짓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우크

라이나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바이든은 12월 22일,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을 열고 2조 원이 넘는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자 푸틴은 차세대 ICBM 실전 배치를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동유럽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 전에는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무기들은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인다. 한국 정부는 그 무기에 희생당하지 않으려 탈출한 러시아인 난민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무기 수출이 “우방국들[즉,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이 악화되는 데 일조하고, 결국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야 할 대상은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배자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범한 대중이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무력이 아니라, 전쟁을 추동하는 자국 지배자들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다.

푸틴이 동원령을 내리자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징집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징집을 피한 탈출도 이런 저항의 한 형태이다.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평범한 러시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확전을 낳을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러시아인들의 저항에 연대하는 방법이다. 그 연장선에서 러시아인 난민도 환영해야 한다.

인천공항에 억류된 러시아인 난민들은 지원 단체들의 도움으로 법무부의 결정에 맞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임준형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 반값 등록금이 위협받고 있다

양선경 서울시립대 학생,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12월 1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 지원금을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100억 원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국민의힘)는 서울시립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자체수입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의미한다. 지난해 자체수입금 403억 원 중 327억 원(81퍼센트)이 학생들의 수업료였다.

등록금과 월세 등 생활비 마련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처지는 아랑곳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고물가 때문에 요즘 많은 학생들이 편의점 삼각 김밥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다.

지금도 부족한 지원

김현기는 2012년에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10년간 서울시가 예산을 쏟아부은 것처럼 호도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걸맞게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왔다.

등록금이 준 만큼 더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정책 도입 초기에 학교 전체 예산이 줄었다(2011년 803억 원에서 2013~2015년 700억 원 대). 학교 예산 부족은 강의 통폐합, 강사와 조교 부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시 지원금이 주로 사용된 곳을 보면, 비전임교원 인건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확충, 강의실 및 실험실 여건 개선 등), 교육행정일반(도서관 운영, 기관운영관리) 등이다. 모두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지금도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 대란이 일어나고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시 지원금을 줄이면 학생들의 교육조건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김현기가 서울시립대가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이 전무하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와 달리, 학교 당국은 어떻게든 등록금을 인상하려 애써 왔다.

학교 측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꾸준히 '인상 요인'을 거론하며 학부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하하기

어렵다는 조건을 이용해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올렸다. 올해 외국인 학부 신입생 등록금은 무려 2배나 인상됐다!

이 밖에도 학교는 학생식당 가격 인상, 주차공간이나 연구공간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수익사업을 확대해 왔다.

서울시 지원금 삭감은 이런 방향을 강화할 것이다.

김현기의 반값 등록금 공격 발언에 예산안 삭감까지 이어지자 학생들의 불만이 거세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이번 예산 삭감에 대응해 진행한 설문조사에도 이런 의견들이 쏟아졌다.

"반값 등록금은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더 오랜 시간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받침이었다."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면(김현기는 반값 등록금이 '교육 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가는 게 옳다."

총학생회는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받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반대 목소리를 모으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12월 23일 총학생회가 주도한 공동성명에서 '자체수입금을 올리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우려스럽다.

이런 논리로는 우파와 학교 당국의 등록금 인상 압박이나 수익성 강화 논리에 제대로 맞서기 어렵다. 대학 교육은 권리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마땅히 국가(지방정부 포함)가 책임져야 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파들은 곳곳에서 공공 서비스와 복지를 삭감하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서민 대중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반값 등록금 예산 삭감도 이런 맥락에 있다. 이번에 서울시의 다른 복지 성격의 예산들도 대폭 삭감됐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의 절반 이상 삭감됐고,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5688억 원이나 삭감됐다.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 윤석열 정부 모두 이런 방향 속에 있다.

금리와 물가 인상,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투쟁의 성과인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공격은 팍팍한 대학생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법적 규제가 있어서 등록금 못 올린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규제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부 받지 못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19년 말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실현되지 못했다.

올해 6월에도 교육부 차관이 등

록금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장 규제가 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게다가 김현기는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을 삭감한 취지가 "대외적으로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한 시의회 차원의 실질적 처방"이라고 말했다(《시정일보》). 다른 대학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12월 16일 기사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한다. 그다음에 사거리 1000킬로미터 이상으로 개량된 미사일을 지상 기지에 배치하고, 향후 함정과 전투기에 탑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2030년 무렵까지 개발·배치한다.

반격 능력 보유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외 정책이 한층 높은 단계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45년 태평양 전쟁 패배 이후 일본은 70년 넘게 공격받을 때만 자국 영토 안에서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따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원칙은 무너져 왔다. 전임 아베 내각은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했다.

이제 안보 문서 개정으로 일본은 적 이 공격에 "착수"했음이 포착되면 "반격"하게 된다. 심지어 동맹국(미국)이 공격받아도 일본 자위대는 똑같이 "반격"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일본이 유사시 중국·북한의 군대와 영토를 선제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군비 확충 계획도 못 박았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1퍼센트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 2퍼센트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5년 뒤 일본 방위비는 100조 원이 넘어 세계 3위로 급상승하게 된다.

일본은 대대적인 군비 확충으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한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인 도전"으로 규정했다.

미·중 갈등이 점증하면서 대만을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일본의 군사대국화 11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년 기념 국제관함식

비롯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긴장이 쌓여 왔다. 일본은 중국이 이 바다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협한다고 여긴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대만의 유사 사태는 일본의 유사 사태"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해 온 까닭이다.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전쟁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는 크게 방위비 증액 등 일본 자체의 역량 강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미·일 공동작전계획 작성과 일본-호주 안보협정 체결 등 동맹 강화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그래서 일본의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바로 미국이 바라는 바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대담한 역사적 진일보"라며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즉시 환영한 까닭이다.

지난 8월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보여줬듯이, 미국과 중국 등의 제국주의 갈등은 인도-태평양의 불안정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일본의 폭주는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미래를 가리킨다.

군비 증강은 일본 대중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매년 예산의 22.6퍼센트를 정부 부채 이자를 내는데 쓰고 있다. 기존 재정 구조로 군비 증강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기사다 총리는 소득세와 담뱃세 등의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증세를 두고 벌써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일본 공산당은 옹케도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 문서 개정에 반대하며, 이대로 가면 대규모 증세와 민생 예산 삭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그 부담을 대중에게 떠넘기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앞으로 일본 안팎에서 반발을 부를 공산이 있다.

한반도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은 한반도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선제 공격 대상이 되니까 말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김영익

이 커지자 국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정부도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일본이 사전에 한국과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반격 능력 행사는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안보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런 변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를 어떻게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비록 윤석열 정부가 '사전 동의'를 주장하지만, 사실 정부 핵심 인사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군비 증강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열도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며 일본의 군비 증강 필요성을 인정해 줬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효는 북한의 '도발' 억제 위해 한일 군사 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인사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그저 "굴욕 외교"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오늘날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종속된 처지가 아니라, 자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미국·일본과 손잡은 협력자이니 말이다.

군비 증강, 독도 영유권 주장, 한반도 개입 의지 등 일본 제국주의의 행보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경계와 반발을 살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윤석열의 선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동자연대 TV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

12월 28일(수) 오후 8시

발제 **차승일**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번역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

참가신청

bit.ly/1228-meeting